

“문학단체 갈등 여전...광주시 나서 건립 주도해야”

광주에 문학관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문학단체 간 갈등 해소 그리고 부지선정 등과 관련한 광주시의 투명한 행정절차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번 진행했던 문학관 설립 과정에서 지역 문학단체 간 이견과 부지선정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했던 행정 절차 등이 끝내 사업의 발목을 잡았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충분한 토론회와 공청회 부더=광주지역 문학계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문학관 건립이 물 건너 간 데는 문학단체 간 갈등이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2009년 8월~2010년 5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 빛고을문학관 건립을 추진했다. 당시 광주시는 국비 32억원과 시비 91억원 등 모두 123억원을 들여 지난 2015년까지 명성에식장 건물에 매입·리모델링해 전시관과 기획전시실, 창작실, 체험관 등을 갖춘 문학관으로 재탄생시킬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 문학단체 간 갈등이 빚어졌으며, 명성에식장이 후보지로 선정된 직후 ▲건립 후보지가 문학과 아무런 연관이나 상징성이 없는 예식장 건물이며

광주문학관, 이전 심한 문학단체에 맡기면 해결 요원 토론회·공청회로 정당성 확보...부지선정 잡음 없애야

▲소유주가 제시한 매각금액이 지나치게 높고 ▲추진위원회가 건립 후보지까지 선정한 것은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학관 후보지를 동구에만 한정해 공모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광주시가 문학관 건립을 재추진할 경우, 충분한 토론회나 공청회를 통해 문학관 건립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부지를 선정하는 등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법시민적 합의도 필요=지역 일부 문학인들 사이에서는 “문학단체 간 갈등만 불러일으키는 문학관 건립을 왜 재추진하느냐”는 목소리도 있다. 과거 문학관 건립 과정의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고,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너무 성급하게 재추진

한다는 것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문학단체만 9개에 달해 문학관 건립 과정에서도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무산됐던 ‘빛고을문학관’ 건립 과정에서도 문학단체 간 갈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어느 단체가 주도적으로 건립을 추진하는지와 함께 어느 지역에 세워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문제까지 겹쳐 사업 자체가 무산됐다.

이처럼 문화단체나 지역 간 갈등으로 사업이 무산된 경우는 광주뿐 아니라 국내 다른 지자체에서도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는 문제다.

지난해 국립한국문학관도 부지선정 공모에 24개 지역이 신청을 하는 등 과도한 지역간 경쟁으로 공모가 중단되기도 했다. 정부도 문화단체와 지역의 갈등이 불거질 경우, 사업을 중단하고 있는 셈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문학관 건립은 문학인뿐 아니라 지역민의 공감대도 형성돼야 한다”면서 “법 시민적 합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은 뒤 문학관 건립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국민이 불안하다면...” 민주당 사드 배치 고민

청 “문대통령 조만간 트럼프와 통화” 국방부, 발사대 4기 임시 설치 후 배치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국면이 계속되면서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배치 문제를 놓고 부심하고 있다.

〈관련기사 8면〉 그동안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군사적 실효성 등의 이유로 당내 반대 의견이 높았지만 중대한 안보위기 상황에서 집권 여당이 이 같은 입장을 전면에 내세우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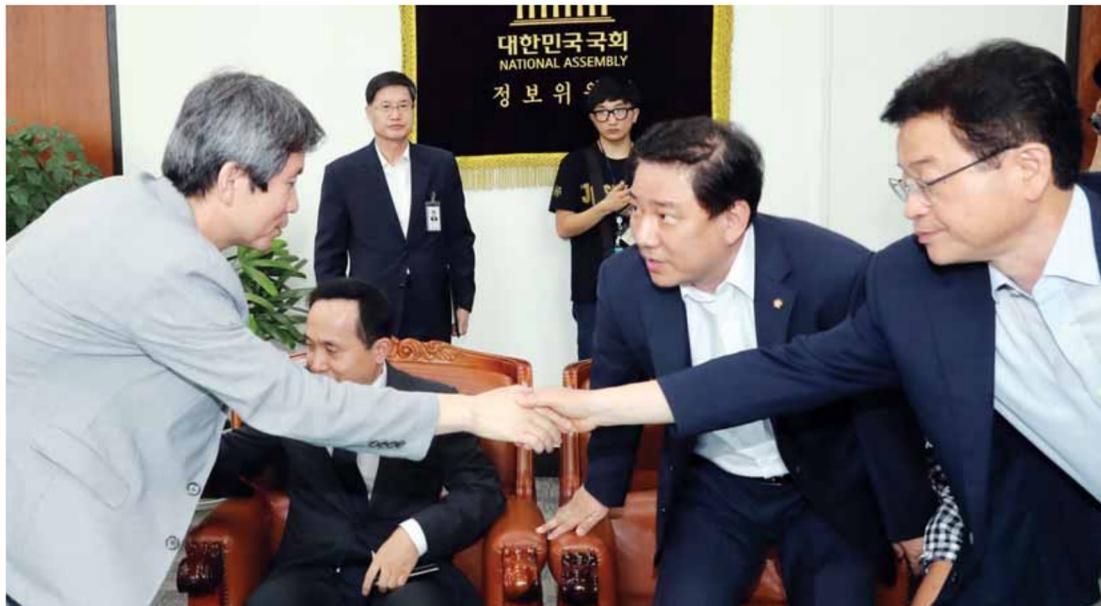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해 사드 4기 발사대 임시배치 지시를 내리면서 민주당의 선택지가 더 좁아진 모습이다. 민주당이 문 대통령의 사드 임시배치 결정을 내리자 “적절한 조치”라는 공식 입장을 내면서도, 최종 배치 결정은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이런 이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이 지난 4일 ICBM급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을 때만 해도 민주당 사드특위는 이를 후인 지난 6일 “사드가 북한 ICBM에 대한 대책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추미애 대표도 같은 날 추귀홍(邱貴洪) 주한 중국대사와 만나 “사드 실용성에 대해서 정치·외교적으로 과장·과열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의 위협에 따른 임시 배치에 찬성하면서 완전 배치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은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입장이 오락가락했다는 비판도 야당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도발과 관련, 금주 말 여름 휴가를 다녀온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가질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지난 31일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조만간 통



국회 정보위, 北 ICBM 간담회 국회 정보위 이철우 위원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간사(오른쪽 둘째), 김상균 국가정보원 3차장(왼쪽 둘째), 이인영 의원이 지난 31일 국회에서 열린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화성-14’ 관련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화할 예정이고 일정은 조율 중에 있다”며 “정확한 시점은 현재 알 수 없으나 대통령이 휴가를 다녀오신 직후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통화 역시 문 대통령의 휴가 직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이에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는 이날 오전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와 관련, 50분가량 통화하고 공동 대응 방침을 확인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미 정상 간 통화가 이뤄진다면 북한에 대한 일관된 입장,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한국과 미국, 한국과 미국·일본이 어떻게 더 강도 높은 제재를 할지에 대한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 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추가 임시배치 문제와 관련, “발사대 4기를 위한 임시패드를 설치할 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위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잔여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와 관련해 “임시배치라는 것은 국민이 불안하다고 하면 재고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어 “사드 임시 배치라는 의미는 (북한이) 레드라인을 너무 빨리 넘었기 때문에 임시로 배치해 놓고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는 의미”라며 이 같이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베를린 선언 버리고 대북정책 전면 수정” 3野 총공세

북한이 정부의 대화 제안을 사실상 거부하고 지난달 28일 ‘화성-14형’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자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 보수야당뿐 아니라 국민의당까지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정태우 원내대변인은 지난 31일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는 대북정책에서 지금까지 오락가락 감지(之)자 행보를 보였다”며 “가령 지난 7월 4일 ‘화성-14’가 처음 발사됐을 때는 강력 대응하겠다고 해놓고 이를 후에는 베를린 구상을 내놔다”고 지적했다. 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서도 “당연히 일찌감치 논란을 끝내고 배치해야 하는 것을 시간을 끌다가 인제야 ‘임시’라는 이름으로 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사드와 관련해 미국에 대해서 ‘사드 반복에 대한 의구심을 버려도 좋다’며 배치 의지를 천명하면서 중국에는 철저히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중적 시그널을 보냈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이중플레이와 아마추어 외교로 실수를 거듭하면 전략적 고립으로 귀결돼 외교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각심으로 비상체제에 돌입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한반도 급변사태 대비 비상외교 대응체제 수립”을 촉구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외교는 국익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외교에서도 요란한 언론플레이만 선보이고 국익은 안 보인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혜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대화로 핵 문제를 푸는 게 허상을 깨달아야 한다. 베를린 선언을 버리기를 바란다”고 촉구한 뒤 사드 관련 여야 영수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약속

가장 힘든 순간 함께 하겠다는 약속, 손해보험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비바람에도, 예상치 못한 아픔에도
당신이 일어설 수 있는 힘 바로 손해보험입니다.